

## 남북기본합의서 내용 분석

### <목 차>

#### I. 서론

#### II. 배경

1. 국제정세
2. 북한의 경제난
3. 남한의 북방정책

#### III. 합의과정

1. 예비회담
2. 본회담

#### IV.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문제점

#### V.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의견차이

1. 7.4 공동성명의 재확인
2.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
3. 합의서의 목표
4. 협상의 특징

#### V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1991년 12월 13일,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르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지만 합의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남북간에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시작된 '제1차 북핵위기'와 1994년 '김일성 사망'을 거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고 말았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당시의 국제정세와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남한의 북방정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남북기본합의서 합의과정을 예비회담과 본회담 순으로 따라가 본 후 남북기본합의서를 법적인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합의서에 대한 남북간의 의견차이에 대해 훑어보며 마무리 할 것이다.

## II. 배경

### 1. 국제정세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소련의 해체, 독일의 통일 등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탈냉전의 도래는 북한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안겨주었다. 특히 북한은 냉전구조와 중소분쟁에 의존해서 상당부분 대외적 안정성과 경제·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전략적 환경구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1988년부터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북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의 변화는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여 1985년 4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에서 소련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변혁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상호의존의 세계관과 범세계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사고 정책은 1988년 6월 28일 개최된 제19차 소련공산당 특별 당대회에서 공식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련은 적극적인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의 추구, 지역분쟁에 대한 개입 축소, 외교의 효율화 등을 표방하였다.

소련이 동맹국들의 정책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책전환에 따라 동구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경제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동구 유럽국가들은 국가들마다 차이는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확대, 당과 국가기관의 권력 축소, 다당제 도입, 자유총선거 등의 개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기업의 독립재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런 변화는 공산당 일당제를 마감하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이어졌다<sup>1)</sup>.

1990년대 초 발생한 이러한 국제체제의 커다란 변혁은 남한과 북한에게도 당연히 주목의

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헝가리는 1989년 2월 다당제를 채택한 이후 1989년 10월 21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여 공산당의 일당제를 종식시켰다. 폴란드에서는 1989년 8월 비공산정부가 등장한 이래 1989년 12월 29일 헌법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과 사회주의국가라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1989년 12월 8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도 역시 공산당 체제의 포기를 선언하였다. 1989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제14차 루마니아 공산당대회에서 서기장으로 재선되어 사회주의 강화를 선언했던 차우세스쿠는 12월 25일 처형되었으며, 12월 31일에는 집권 평의회가 당을 해체하기에 이르게 된다. 한편 동독은 1989년 11월 10일 동독국경을 개방하였고 1990년 10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서독간 통일이 실현되었다. 1991년 12월 18일 사회주의권 총주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의 창설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한 축을 이루던 사회주의권은 결국 1992년 말에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산주의 맹주인 소련의 붕괴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련의 지원에 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던 북한은 공산주의의 범세계적인 몰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멸망은 곧 북·소 경제관계의 사실상의 단절로 이어짐으로써 북한은 기본적인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된 것이다.

## 2. 북한의 경제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개혁·개방정책을 펼쳐 나가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변화양상은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 세워 온 세계를 황색세계, 다시 말하여 자본주의화하려는 악랄한 반공전략’인 평화적 이행전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변혁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현혹된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였다.

이후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해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북한은 사회주의의 붕괴 원인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이라는 외부적 위협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잘못 알고 있었고, 사회주의의 근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국제적 연대성마저 약화된 데 기인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의 북방정책이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화시켜 두 개의 조선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체제 변동이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경제격차가 더욱 커지고,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88년 남한과의 공존을 표명하는 한편, 12월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하는 등 외교 정책상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후 북한은 탈냉전과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사회주의권과의 기존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미·일 관계 정상화 추진, 남북 공존 모색,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 추진 등 북한 나름대로의 대응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 3. 남한의 북방정책

북방정책은 남한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동유럽국가 및 중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을 뜻한다. 남한이 공산권국가들에게 문호개방 의사를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 성명’이었다. 이 성명 이후 남한은 소련·중국·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 비정치적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접촉을 확대해 왔다.

이것이 구체화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방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표명하면서부터이다. 북방정책의 공식적 선언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었다. 이 선언에서 남한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18일 제43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 ‘한반도 화해와 통일

을 여는 길’에서 ‘7·7선언’의 기본내용을 재천명하고,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6개국으로 구성되는 ‘동북아평화협회의’를 창설하여 이 6자 협의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북방정책의 성과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2)</sup>. 남한의 북방정책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을, 반대로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북방정책을 허용할 수 없으며 저지·파탄시켜야 하고, 이 정책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절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한의 북방정책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만일 이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셔지지 않을 것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위업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북방정책이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두 개의 조건을 초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여타 국가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은 남한의 북방정책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북한에게 유엔동시가입, 핵사찰을 수용할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종용하였다. 특히, 독일통일 이후 남한의 북방정책은 한반도 내에서 흡수통일 논의를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유지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 III. 합의과정

#### 1. 예비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은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가 북한 정무원총리 연형묵에게 제의한데 대해 북한이 이를 변칙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동 제의는 그동안 북한이 정치·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의해온 것과 관련 교류·협력과 군사문제를 병행 토의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남북 당국 간에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에 대해 1989년 1월 16일 정무원 총리 연형묵 명의의 답변서한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간의 ‘3자회담’ 개최를 촉구함과 동시에 양측의 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군 실권자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양측 각기 차관급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예비 회담을 1989년 2월 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함으로써 결국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남한의 예비회담개최 제의에 동의하였다.

본 회담에 앞서 제1-3차 예비회담이 각각 1989년 2월 8일, 3월 2일, 10월 12일에 공개로 진행되었으나, 회담절차 문제를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계속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지 등 회담 외적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남측은 회담의 명칭, 대표단의 구성,

2) 먼저 북방정책의 외교적 성과는 헝가리와 관계에서 처음 결실을 맺게 된다. 남한과 헝가리는 1988년 9월 13일 상주대표부의 개설을 합의한 이래 1989년 2월 1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1989년 11월 1일은 폴란드와 그리고 1989년 12월 28일은 유고슬라비아와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소련과는 1989년 4월 3일 무역사무소 개설에 이어 12월 8일 영사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1990년 10월 소련과 수교 및 중국과 무역사무소 개설, 1991년 8월 22일 알바니아,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체 15페이지 중 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남북기본합의서 내용 분석

저작시기 : 2010-05

등록시기 : 2010-05-11

자료형태 : hwp, pdf

분 류 : 사회과학

출 처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10913422/>

--- 주의 사항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